**<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에너지 세제를 명확히 하라!

에너지 절약은 애국인가 아닌가? 90년대 이후 에너지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도 직결, 선진국에서는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독 에너지 절약과는 거리가 먼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남아 있다. 교통량이 폭주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공장의 에너지 효율화도 거의 제로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이 KBS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와『1998년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85억달러의 수출효과를 올렸다』며, 에너지를 더욱더 절약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할 정도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에너지 관련세금을 낮춰 휘발유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고 나서 산자부 장관의 캠페인과 대치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재경부가 5월6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하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200원 수준으로 동결토록 한 것이다. 교통세 인하폭은 리터당 40원으로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10.6원이 추가 인하된다. 경유와 등유, LPG, LNG 등 다른 석유제품 세금은 낮추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4월29일 현재 Dubai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16.02달러로 최근들어 2달러이상 상승해 국내 휘발유 가격에 50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 외환위기 이후 임금감소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제유가 인상분을 세금인하로 흡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무사안일과 부실한 정책, 그리고 부정부패가 유발한「IMF 경제신탁통치」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나서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기특하다(?)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은행부실 및 실업급여 등으로 충당한 수십조원의 국가채무는 무엇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교통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연간 5000억원, 1999년 2800억원에 달한다.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휘발유 가격을 100%이상 올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인상요인을 세금을 낮춰가면서까지 흡수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다.

분명 정유사의 로비가 먹혀 들어간 결과일 것이다. 정유사들은 1999년들어 신문 및 TV를 동원해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 1998년 국제유가 하락시 올렸던 석유관련 세금을 국제유가 상승시기에 내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경영난을 덜기 위해 국민을 팔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를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최근 정유사들의 로비에 춤을 추듯『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96달러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통세 인하를 거들어왔다. 휘발유 가격이 비싼 이유는 에너지 관련세가 휘발유 가격의 78%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IEA의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수치는 영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14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이태리 1.07달러, 프랑스 1.05달러, 독일 0.84달러, 일본 0.83달러이고, 경쟁대상국인 싱가폴 0.65달러, 대만 0.50달러, 미국 0.25달러, 중국 0.22달러 등이다.

경유 가격은 영국이 리터당 0.90달러로 가장 비싸고 일본 0.68달러, 이태리 0.67달러, 프랑스 0.58달러, 독일 0.52달러 순이며, 한국은 0.38달러로 6위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내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 비율이 4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산유국 평균 80.6%에 비해 절반밖에 안된다는 이상한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다.

화물차와 서민들의 필수품인 경유와 LPG 가격은 올리고, 휘발유는 세금을 내려서라도 인하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기 위해 새로 에너지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것과는 전혀 상이한 사고인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덧붙이지 않

은게 다행이다.

에너지정책은 일시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수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9/5/10>